

제20대 국회의원 선거

새누리당 10대 정책

10대 과제	상세 실천과제
1.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!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U턴 경제특구 설치 ◦ 관광산업 활성화 ◦ 해양관광 활성화
2.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!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및 개인 발굴·포상 ◦ 2,000억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R&D 사업 신설 ◦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◦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일몰 조항 폐지
3.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!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◦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◦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
4. 가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!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◦ 취약계층(장애인·치매어르신 등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◦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
5.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!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◦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(K-MOOC) 서비스 활성화 ◦ EBS-2TV 본방송 조기실시 ◦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
6.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!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빙집 리모델링으로 1~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◦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조성 ◦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◦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
7.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!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◦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없는 환경 조성
8.公正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!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 ◦ 임금체불 원천봉쇄 ◦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◦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균절 ◦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 균절
9. 서민 금융을 보호하겠습니다!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
10. 아동이 기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!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

(1) U턴 경제특구 설치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는 매년 200~300억 달러 규모로 증가, 해외법인은 매년 2천여개씩 증가,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총 고용인원은 약 281만명(14년) 규모
 -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시 내수 부진, 일자리 감소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
 - 미국,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적극적인 자국 기업 U턴 정책 추진 중
- 최근 차이나 아웃 가속화는 제조업 U턴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, 해외 현지법인들이 국내로 U턴할 경우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상당한 효과 예상

□ 목표

- U턴 경제특구 설치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(10% 유턴 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)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1. U턴 전 편안한 국내 정착 유도

- 전국의 주요 산단 내에 U턴 경제특구 설치
-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
 - (세제지원) 철수방식(완전 철수 또는 부분 철수)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법인세·설비수입 관세감면 혜택 등의 세제 지원 확대
 -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(현행 1~2억원) 2배 확대
 - 향후 대기업이 해외에서 부분 철수 시에도, 중소기업과 동반 U턴 시 지원 확대
 - (공장입지) 2~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과 임대기간 종료 시 국내 고용성과 및 지방세 납부실적 등으로 재연장 검토

2. U턴 후 성공적 국내 정착

- 유턴 경제구역을 한시적으로 최저 규제지역으로 운영
 - 유턴기업 안정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근로 혜택

3. U턴 경제구역을 혁신의 구심점으로 육성

- 전용 산단에 공동 연구개발이 가능한 R&D 센터 설치
- 취업 희망자 직업훈련 및 재직자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고급인력 양성센터 설치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2) 관광산업 활성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2015년 관광수지는 메르스 영향 등으로 적자가 60억 9,460만 달러
- K-Pop 등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 매우 열악(1만명 이상 수용 가능 전문공연장 전무)
- 국토의 64%가 산지이고 이중 77%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로 구성, 산림보호 등의 이유로 산지를 관광자원화하지 못하는 상황
- 외국인 관광이 서울과 제주에 편중되어 지역 간 관광산업 불균형 심화
- 지방관광을 위한 교통시스템 미흡
- 관광콘텐츠 부족으로 방한관광객의 주요 활동이 쇼핑에 집중
-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국 중 29위 차지, 자연자원과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미흡 및 값비싼 관광비용

□ 목표

- 관광활성화로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1. 한국만의 경쟁력있는 문화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

(K-POP 아레나 조성 지원)

-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K-POP 본 고장의 명성에 걸맞는 대형 K-POP 아레나 공연장 조성
- 수준 높은 전문공연장에서 정기적인 K-Pop 공연으로 외래관광객 유치
- 장기적으로 대도시에 전문공연장 확보하여 지방관광 활성화

(K-Culture Valley 조성 지원)

- 융복합 미디어 콘텐츠와 쇼핑·문화를 아우르는 한류 콘텐츠를 집적하여 한국관광의 랜드마크 구축
- 쇼핑, 음식, 영화, 음악, 패션 등 원스톱 플랫폼 구축

2.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진흥

- 「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규제를 합리화 및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추진 근거 마련
- 국립공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을 제외하여 산림훼손 최소화
- 임도를 활용하여 트래킹 코스, 산악자전거길 조성
-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여 스포츠파크, 힐링파크, 친환경농축산 테마체험시설 조성

3.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구축

- (코리아 투어 패스 도입)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철도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통 패스를 도입하고, 관광지 이용과 숙박·음식점 할인 등으로 확대
- (K 트래블 버스 확대) 서울과 지방을 잇는 'K 트래블 버스'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지방관광을 위한 교통편의 제고
- (외국인 전용 관광 앱(App) 제작) 교통정보, 실시간 통역기, 관광지 지도 기능 탑재

4. 기타

- (웰니스 의료관광 전략적 육성) 치료를 위한 환자 유치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증진(건강 검진, 한방, K-뷰티, 스파, 찜질방 등) 중심의 관광객 유치
- (특화된 벤처 여행사 육성) 웰니스 의료관광, 유적지 관광, K-Pop 공연 전문 등 특성화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3) 해양관광 활성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해양레저·관광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여가휴양시설 부족
- 해양레저체험 인프라, 체험·교육프로그램 부족으로 해양관광산업 발전 지체
-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마리나 관광수요도 커지고 있으나 시설 미비와 산업기반 취약

□ 목표

-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로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1. 권역별 종합해양관광지구 및 해양관광 바닷길 조성

- 권역별 주요 해양관광도시에 요트, 수중관광, 해양레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종합해양관광지구 조성 및 종합해양레포츠 센터 건립, 나아가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
 - 주요 도시의 마리나 시설, 수상레저체험장, 해안누리길 등을 연계하여 요트, 카누·카약 등을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'바닷길(가칭)' 조성
- * 요트를 이용한 국토대장정, 해안누리길 종주 이벤트, 해양레저스포츠 철인 3종대회(요트, 카누, 바다수영)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

2. 해양자원 활용한 해양치유(해양헬스케어) 관광산업 육성

- 해양치유 산업화 기반 마련 위한 기초연구 및 해양헬스케어산업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
- 재활·치유 및 레저관광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헬스케어 시범센터 건립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해양치유 전문지도사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원

3. 크루즈 산업 활성화 위한 인프라(선박확보, 크루즈부두, 국제여객터미널) 확충

- 국적선사가 고가 크루즈선 매입 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크루즈 펀드 도입 추진
- '20년까지 크루즈 전용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확충하여 크루즈 관광객 수용 여건 대폭 개선

4.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추진

- 거점마리나, 어촌마리나 등 마리나 인프라 지속 확충 및 마리나산업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업 촉진
- 레저선박 전문인력 교육센터, 중고선박 오픈마켓 등을 갖춘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

5.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「수중레저법」 제정 및 업종 신설, 지역별 수중레저 포인트 발굴 및 수중 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수중레저거점 기반조성 추진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1)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및 개인 발굴·포상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 및 개인들을 적극 발굴·지원하여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
-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, 문화확산 등 창조경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창조경제대상을 포상 중
- 그러나 창조경제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기업, 개인들이 창조경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

□ 목표

- 창조경제 활성화 유도로 미래성장동력 육성 기반 마련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‘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’ 범위 확대, 훈격 상향 조정, 인센티브 강화
- 창조경제 활성화 및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창조경제 대상의 범위 확대, 훈격 상향 조정, 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
 - (훈격 상향) 현재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훈·포장으로까지 상향 조정, 11점인 시상 개수대폭 확대
 - (인센티브) 창조기업에게는 고용창출우수기업 우대지원에 준하는 세액공제, 금리 우대, 세무조사 유예, 우선구매 제도 적용, 창조경제인에게는 APEC 기업인 카드에 준하는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출입국 우대 조치 등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인 제공
 - (네트워킹) 창조경제 기업과 개인들이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조성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2) 2,000억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R&D 사업 신설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‘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2,979개이며 85.7만명 고용 중
- 전체 수출 감소($\Delta 8.0\%$)에도 중견기업의 수출은 오히려 3.2% 증가하였으나 중견기업의 저조한 R&D는 중견기업 대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
- 현재 중소기업 전용의 정부 R&D 지원 사업은 운용(‘16, 8,532억원)하고 있으나 중견기업 전용의 R&D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이며, 정부 R&D 중 중견기업비중이 3.1%로 중소기업(13.7%) 및 대기업(3.9%) 보다 상대적으로 취약

□ 목표

-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업화 지원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맞춤형 R&D 지원 프로그램 도입
 - 우선 R&D 수요조사(‘16년) → 예비타당성 조사(‘17년) 등을 거쳐 ‘18년에 1,000억원 규모로 중견기업 전용 R&D 신설
 - 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‘20년까지 2,000억원 규모로 단계적 확대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3)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증가는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,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 · 전문 인력 부재 · 정보의 불평형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
-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은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, 막대한 경영 차질 초래
- 과거의 특허분쟁은 글로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으나, 최근에는 분쟁대응력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도 특허소송에 노출되어 대책 마련 시급

□ 목표

- 중소기업의 특허 ·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기반 마련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특허소송 이외에도 해외지재권 출원 · 특허전략 수립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
 -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평상시에는 소액의 월별부금을 납입하고, 특허소송 · 심판 ·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비용을 先지원해 주고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
 - 「발명진흥법」에 법적근거를 마련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4)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일몰 조항 폐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「벤처기업법」)은 '97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'07년에 10년 연장하였으며, '17년 말 일몰 도래 예정
- 그동안 「벤처기업법」을 기반으로 벤처기업 3만개, 매출 천억 벤처출신기업 460개(1조원 이상은 6개)로 증가하면서 벤처기업은 고성장기업의 역할 모델로 자리매김
- 한시적인 「벤처기업법」으로는 벤처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고, 모처럼 맞이한 벤처 재도약의 분위기를 냉각시킬 우려가 있어 「벤처기업법」의 한시조항을 없애고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이 필요

□ 목표

-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적 법적 기반 마련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'17년 12월 31일까지인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일몰 조항 폐지
- 시장친화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 개편
 -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벤처캐피탈 등 민간주도로 재설계 등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정책
순위 3

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!

(1)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청년의 구직 애로는 제한된 정보, 경험 부족, 금전적인 부담 순으로 나타나, 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보 제공,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
- 현재 청년희망재단에서 '청년희망아카데미'를 운영,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, 서울 지역에만 설립되어 상대적으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됨

□ 목표

- 대학 졸업자부터 만34세까지 청년들의 확실한 취업 보장을 위한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, 교육, 창직 원스톱 등 지원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여, 지역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 추진
(※청년희망펀드 활용방안 검토)



- 청년희망아카데미 내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(FCP)*, 엔지니어링아카데미프로그램(E.A.P)**, K-JOB 프로그램*** 신규 도입으로 맞춤형 일자리 확대

* FCP : 신산업 관심 청년 및 우수 중견기업 교육생 대상 미래 역량 교육 실시 및 취업 연계

** E.A.P :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, 네트워크 내 기업 요청 특화 교육 등 진행 및 취업 연계

*** K-JOB : 창직 교육, 창직을 기반으로 한 창업 전환 시 스타트업 지원 등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2)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새일센터(‘15년 147개소)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(재취업한 여성 중 40~50대 여성이 70%를 차지)
- 30대 경력단절여성 등의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확대 및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필요

□ 목표

-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경력 개발형 새일센터 확대,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운영
- 경력단절여성 채용 수요가 많은 주요 산업별 협회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
-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 부처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강화
- 취업여성의 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온-오프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신규 제공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3)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증가율(‘17년 14% → ‘25년 20%)과 노인 빈곤율(‘14.4분기 44%) 등을 고려 할 때 어르신의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

□ 목표

-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‘17년~‘20년까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 공급 → (‘20년) 78.7만개
 - 고령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 매년 6만개씩 확대, 어르신 민간취업 일자리 매년 3만개씩 확대
 - 어르신의 재능나눔은 매년 1만개씩 확대, 활동 지원기간 연장(현행 6개월→9개월)
- 어르신 채용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, 공공기관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하는 「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」(가칭)을 제정
- 17개 시도에 취업교육센터(‘15년 6개소 → ‘16년 8개소, 개소당 50백만원)를 지정하여 맞춤형 직무설계 및 직무 교육 실시
- 모든 시군구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을 확대 설치하고,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개선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정책
순위 4

가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!

(1)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지난 2000년에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였지만, 아직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 존재
-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,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등 개선 필요

□ 목표

-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여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완화 및 건보료 형평성을 꾀함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, 재산,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제외

- 평가소득을 없애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없게 되므로 이러한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(세대당 평균 1만원 내외 인하효과 예상)
- 자동차의 경우 일부 고가의 자동차는 제외 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(세대당 약 11,000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효과)
- 서민층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 노력
- 월급 이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과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2) 취약계층(장애인 · 치매어르신 등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일상생활에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의 정보격차 심화

□ 목표

- 취약계층에 대한 전용단말기 보급으로 통신이용 격차를 해소하고, 특화서비스를 통해 치매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전국 17개 광역시 · 도 치매어르신, 장애인 등 2만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착용이 간편한 안심 팔찌와 특화서비스(위치확인서비스 등)를 지원
 - 치매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단말기에 내장된 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치매어르신 위치 확인
 - 안심존(Zone)을 설정하여 치매어르신이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줌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3)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 · 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나, 현재 저소득 근로자, 청년창업가 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, 특히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 446 만명이 아직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

□ 목표

- 경력단절 전업주부, 청년 취 · 창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
- 가입기간 5년 밖에 되지 않아,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, 5년치 보험료를 추납하면 5,7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<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>

구분	종전 가입기간	추납 기간	보험료 총액		연금수령액(20년)
			종전	추납	
소득	100만원	5년	5년	540만원	540만원
	200만원	5년	5년	1,080만원	1,080만원
					4,293만원
					5,703만원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경력단절 주부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추납을 허용, 446만명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확대할 예정
- 청년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(창업크레딧/취업크레딧 등 연금보험료 지원) 확대
 - (창업 크레딧) 18~34세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20% 추가 지원(4.4만명)
 - (취업 크레딧) 18~34세 청년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 시 연금보험료 10% 추가 지원(30만명)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정책
순위 5

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!

(1)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'14년 총 사교육비는 18.2조원, 사교육 참여율은 68.6%로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으나, 1인당 사교육비는 24.2만원,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5.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0.3만원, 0.5만원 상승
- 사교육은 점수위주의 암기식 학습태도를 조장하여 공교육 창의인재 양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

□ 목표

- 사교육 부담 경감 및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반 구축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, 수학, 예체능 교과에 집중 대응하여,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 내에서 흡수할 계획
-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등 학교급 별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
-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
 -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 대상으로 수학·영어·예체능 과목 등에 대한 한국 장학재단 주관사업인 대학생 지식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전국으로 확대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2)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(K-MOOC) 서비스 활성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K-MOOC에 개설 중인 강좌(27개)의 분야와 수가 적어 다양한 배경과 관심 분야를 가진 학습자의 수요 부응을 위해 개설 강좌 확대 필요
- K-MOOC 강좌 이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부족으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강 유인에 한계가 있음

※ MOOC란 ?

- (개념)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,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, 웹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
- (특징) 교수-학생간 질의·응답, 토론, 퀴즈, 과제 피드백 등의 학습관리, 학습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-학습자간, 학습자-학습자간 양방향 학습 가능

□ 목표

- 대학의 우수 강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고등교육기회 균형 실현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K-MOOC 개설 강좌를 확대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
 - 개설 강좌수 '15년 현재 10개 대학*에서 27개 → '16년 1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
*경희대, 고려대, 부산대, 서울대, 성균관대, 연세대, 이화여대, 포항공과대, 한국과학기술원, 한양대
 - 다양한 이수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적극적 수강 유인 제공
 -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 K-MOOC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활용^{*} 형태 확산
- * 온-오프라인 혼합 수업(Blended Learning), 거꾸로 수업(flipped learning), 학습부진·부적응학생 대상 반복학습 등
- 대학별로 정하는 일정 요건에 따라 학점인정 시범운영으로 학습의 시·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
 - 개인 학습자의 자기계발 활용 외에 공공기관·민간기업의 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원 재교육 시, K-MOOC 강좌 활용 확대

※ 재직자가 K-MOOC 강좌 이수 시,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받는 방안 추진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3) EBS-2TV 본방송 조기 실시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무료 지상파채널인 EBS-TV(교육방송)는 교양,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90%이상 편성하고 있어 정작 서민층의 초·중등 교과목 및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를 완화할 학습프로그램이 부족

□ 목표

- 서민층 사교육비 연간 약1,800억원 절감 효과 기대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 EBS-TV(교육방송)의 채널을 한 개 더 추가하여
 - 서민층의 초·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간 1,800억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
 - 신규채널(EBS-2TV)의 조기 방송을 위해 방송법령을 개정하고,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
- * EBS-2TV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: '16년 20억(시범사업용), '17년 40억, '18년 60억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4)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영재교육에 대하여 소외자 없이 개개인이 꿈과 끼를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
- 영재학급, 영재교육원, 과학교·영재학교 등에서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비 및 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, 소외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한 맞춤형 정책 부족

□ 목표

- 소외계층 영재가 창의적이고 큰 인재로 성장할 기회 확대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영재교육 소외자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 선발 확대
※ 영재교육 소외자 수혜율 : 2.46%'(12)→3.81%'(15)→5.5%'(16)
- 영재교육 소외자 유형별(저소득층, 다문화, 탈북학생, 장애학생 등) 영재 발굴을 위한 맞춤형 선발도구 개발 및 보급
- 표준화된 검사(창의성 검사 등) 선발방식에서 교사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학생을 관찰하여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로 교사 관찰 및 추천제 내실화
- 체크리스트, 수행관찰 도구 등을 활용한 선발방법 정교화 및 다양한 선발도구의 상호 보완적 활용을 통한 신뢰성 강화
※ 관찰·추천 실시기관 비율 : 81.2%'(13) → 83.0%'(14) → 90.0%'(16) → 100%'(17)
- 영재교육 소외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연구 추진 및 과도기적 프로그램* 지원 확대
* 과학교 사회적 배려자 입학생 학력신장 등을 위한 Bridge 프로그램 운영 지원
- 분야별 영재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초·중·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영재교육 지원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1) 빈집 리모델링으로 1~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최근 정비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심(洞지역)내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범죄 유발,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
-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부족 해소를 위해 유휴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주거 확산 필요
 - 인구 감소로 점차 증가하는 빈집·빈방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축 없이도 잉여 공간 공유를 통해 저렴한 주거 공급 가능
 - 쇠퇴하고 있는 도심 공동체 회복 및 계층 간 교류 확대 효과

□ 목표

- 빈집을 리모델링 후, 1~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,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제공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「도시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」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, 활용사업 지원,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,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
- 빈집을 철거 후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, 기금 지원을 통해 수리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용 사업 발굴
- 매년 600호 수준의 정비사업 추진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2)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결혼·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필요
-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홀몸어르신 등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필요
 - 홀몸어르신 등의 경우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해서는 주거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

□ 목표

- 신혼부부 및 저소득·홀몸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전국 확대

-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'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
- '17년까지 행복주택 건설물량 중, 신혼부부용 투룸을 대폭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양육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도입하는 등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
- 어르신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
-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'16년~'17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, 향후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지속 공급
 - * '16년~'17년 재정과 민간기부금을 공동활용하여 공공실버주택 16개동 공급('16년 11개동 선정하여 추진 중)
- 연간 800호 수준의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3)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주민자치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사무소가 부과 및 관리
- 관리비 적정집행 유도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과 자체 감사 등을 운용 중이나 투명성제고에 한계
- 인건비가 제외된 기형적 입찰방식으로 관리비리 증가
- 공동주택 단지별로 청소, 경비, 경리 등 관리사무소 직원 수가 달라 적정한 관리인력 기준 필요
- 현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, 비의무관리대상(30세대 이상으로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)은 국토부의 「주택법」 일부 규정 이외에 주로 법무부의 「집합건물법」 적용을 받아 관리가 이원화된 상태
- 세부적이지 않은 「집합건물법」 규정으로 대부분 자율적인 운영체제에 머물고 있어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및 입주민 분쟁과 불만 초래

□ 목표

- 관리비 산정을 투명하게 하고,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다른 유사단지의 관리비 수준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관리비 분쟁해소 및 인하 유도
-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소규모 아파트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관리비 분쟁 감축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입찰 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유도
- 공동주택 관리비 빅데이터를 이용, 관리비의 적정부과 및 관리여부를 검증하여 적정집행을 유도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비리요인 사전 차단
 - '17년부터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리비의 적정집행과 투명성 확보
- 비의무관리대상(약 360만세대, 전국 1,210만세대 중 약 30%)에 대해서도 의무관리대상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 중
 - 관리비 내역 공개,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, 동대표 교육이수 등을 의무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
 -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기준과 주택관리사 인정 관리실적 기준인 50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관리비 내역고지 및 공개 의무화(30세대 이상은 권고)
 -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의 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비 공개 항목 수 등 결정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4)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.4%에 불과하며(‘15.4월 기준), 대학가 주변의 원룸,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여전히 열악
- 국·공유지 부지에 공공기금(주택도시기금, 사학진흥기금) 또는 민간기부금을 통해 행복(연합)기숙사 사업 추진 중*이나 수요에 비해 부족

* 4개 사업(서울2, 경기1, 부산1) 3,766명 수용규모

□ 목표

-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로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국·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
 -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추진(지역별 기숙사 수요 분석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)
 -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,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건립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*으로 기숙사를 제공

* 건립비 전액 국고 지원시, 국립대 기숙사비 수준인 월 15만원(2인실 1인당)으로 공급 가능

→ 공공기금으로 건립하는 기숙사(월24만원) 대비 약 60% 수준이며, 사립대 민자기숙사(월31만원) 대비 약 50% 수준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정책
순위 7

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!

(1)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‘15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, 전체 취업자 2,614만명 중 21.5%에 달하며,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
- 자영업자 평균 월매출은 ‘10년 990만원에서 ‘13년 877만원 수준으로 하락, 최근까지도 유사한 양상
- 전반적인 경기하락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연령층의 자영업 진입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로 경영여건이 악화
- 지난해 76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큰 어려움 존재

□ 목표

-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, 폐업자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중산·서민층의 생활 안정화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, 세무조사 면제 기준도 완화
- 현재 자영업자 대상 소득세의 5~30%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해, 7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인상 적용
 - *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(현재 지역별, 업종별, 규모별로 5~30% 차등 감면율 적용)
- 현재 국세청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대비 110% 이상 신고한 소규모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것에 더해, 장수 자영업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완화
-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·체납처분(압류 등)이 유예되는 기준 대폭 완화
- 현재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고, 체납횟수, 매출액, 체납액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재기 중소 기업인에 대해 3년간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는 바, 적용대상이 늘어나도록 매출액기준(10억원 미만→30억원 미만) 및 체납액기준(3천만원 미만→1억원 미만)을 완화
 - *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(현재 연 3회미만 체납, 매출 10억원 미만, 체납액 3천만원 미만자 적용)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2)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없는 환경 조성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대형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입, 구도심 상권 침체 등에 따른 서민상권 쇠퇴로 영세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상황
- 상인들의 노력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상권 활성화에 공헌한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
- 구도심 상권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에 따른 상권활성화 시,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부재

□ 목표

-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와 도심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「자율상권법」 재정을 통해 상권의 주체(임대인·상인 등)들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조직, 상권을 관리·육성하도록 하고
-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(젠트리피케이션 방지)하기 위한 상가임대차계약 특례조항(계약 갱신요구 5년→10년)을 마련하여 상인 영업권 보호
- 상권회복 요구가 절실하고 자구노력이 확고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선별, 정부·지자체·민간이 협력하여 ‘20년까지 자율상권 선도구역 40곳 육성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1)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상대적으로 해외유학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학생을 별도로 선별하여 국비유학을 지원하고 있으나, 사회적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수혜인원 확대 및 해외유학 비용 증가에 따른 장학금액 현실화 필요
-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비유학 및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, 자격 충족 적격자 부족과 CEO의 추천 절차로 실적 저조

□ 목표

- 저소득층에 대한 국비유학 기회 확대로 사회적 기회균등 실현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예산 추가확보(100억), 지원 자격 및 선발기준 조정을 통해 학업성적과 수학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국비유학생 선발기회 확대
- 석·박사 취득 기간 동안 약 2, 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
 -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‘16년 8명 선발 → ‘17년 50명 선발
- 현실적 제약이 다소 많은 장기 유학 지원과 병행하여 단일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단기 국비유학 과정을 개설하여 수요 활성화 견인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2) 임금체불 원천 통쇄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2010년 이후 매년 임금체불 금액은 1조 2~3천억원 발생, 체불 근로자는 약 27~29만명 수준 (단위 : 천명, 억 원)

구 분	'10	'11	'12	'13	'14	'15
근로자수	276	279	285	267	293	293 (+1.1%)
금 액	11,630	10,874	11,772	11,930	13,195	12,993 (-1.5%)

-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, 도소매·음식·숙박업에서 많이 발생하며 규모로는 100인 미만 (1,241억, 269천명)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이 87.5% (단위 : 억 원)

구 분	전체	제조업	건설업	도소매음식 숙박업	금융보험부동산 및사업서비스업	운수창고통신 업	기타
2014	1,319	4,047	3,031	1,603	1,422	1,290	1,802
2015	1,299 (▽1.5)	4,750 (△17.4)	2,488 (▽17.9)	1,740 (△8.6)	1,286 (▽9.6)	1,078 (▽16.5)	1,651 (▽8.4)

- 임금체불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폐습이자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부담
- 특히, 100인 미만 제조업, 도소매·음식·숙박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심각

□ 목표

- 임금체불 원천 봉쇄로 근로약자 보호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
 - * 근로기준법 : 부가금제(법원 판결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액 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), 지연 이자제 확대(퇴직 + 재직근로자),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여 등 추진
 - * 최저임금법 : 최저임금 위반 시,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(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→ 2천만 이하 과태료)
-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확대 추진
 - 노무관리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장이 법위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3)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사례) 감사원이 2015년 1~7월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공(公)기관 47곳을 감사한 결과, 14곳에서 인사 비리가 적발됨

·부산○○공사 :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, 사내외 청탁을 받아 7급 계약직 3명을 특별채용한 뒤 1년 후 정규직 등으로 전환시킴
 ·한국○○○○진흥원 :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공고 후 지원자 65명을 전원 불합격
 ·○○○공사 : 직원을 통해 입사신청 받은 뒤 '12~'14년 504명을 면접만으로 특채

-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근절 필요

□ 목표

- 인사청탁 근절로 기회의 균등 및 공정성 실현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해당 기관 메인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자 정보(이름, 직책 등) 및 위반내용 공개
- 관련 법 개정으로 시행
 -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김영란법) 등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4)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가·공공기관은 「국가계약법」, 지자체·지방공기업은 「지방계약법」에 근거하여 수요 물자 등의 구매에 따른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음
- 그러나,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만 「국가계약법」 의무적용 및 조달청 의무위탁대상으로 한 결과, 자체발주 계약의 경우 자의적 집행에 따른 계약의 공정성·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제기

* 「국가계약법」 의무적용대상 공공기관 :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(자산1,000억원 이상이며 예산 500억원 이상, 현재 200개 중 65개만 해당)

**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: (국가) 물품·용역 1억원 이상, 공사 30억원 이상 계약,
(지자체) 물품 단가계약, (공공기관) 2.1억원 이상 중소기업간 경쟁물품

*** 지자체, 지방공기업은 '06년 1월, 개별 지자체 특성 반영을 위해 「지방계약법」 제정

□ 목표

- 공공기관에 대한 「국가계약법」 적용 확대,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별주 계약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자의적인 계약 집행소지가 없도록 「국가계약법」 적용대상 공공기관(기타공공기관)의 범위 확대
 - 자산 1,000억원 이상이면서 예산 500억원 이상(65개) → 예산 250억원 이상(123개)
- *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
-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청 의무위탁대상 확대
 - 공공기관의 사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형화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무위탁하도록 하여 유착관계 등을 이용한 계약비리 차단(의무위탁대상 : 2.1억원이상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→ 단가계약** 등 추가)
- *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
- ** 단가계약 :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정형화된 물품(예: 컴퓨터, 차량, 복사기 등)에 대해 조달청이 조건에 맞는 업체를 지정하고 단가에 관한 계약을 하면 수요기관이 지정업체에 구매물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계약방식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(5)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 근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서민경제 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여만 개로 골목상권을 형성. 그동안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가맹점주 권리보호 대책 등 법 집행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 및 불공정행위 개선 등 현장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

< 가맹사업법관련 사건접수 및 조치 현황 >

(단위 : 건)

구 분	사건접수	경고이상 조치
2013년	263	74
2014년	267	70
2015년	367	117

□ 목표

- 가맹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법 위반 예방효과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법 집행체계의 추가적 개선 조치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(징벌적 손해배상제)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상, ‘허위·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’, ‘부당하게 거래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등’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

- 가맹본부가 가맹회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·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
- 징벌적 배상금액의 상한은 현행 「하도급법」 규정 고려, 3배 이내 규정

※ 현재 「하도급법」(기술유용, 부당 단가인하 등), 「대리점법」 도입(2015년)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정책
순위 9

서민 금융을 보호하겠습니다!

사금융 대출금리 완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그동안 시장금리가 꾸준히 하락하였으나,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·취약계층에는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(특히 민간 금융회사별로 개인신용 대출금리가 양극화되는 현상 지속)
-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으로 금융수요자인 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종합적 금융서비스(대출, 채무조정, 취업알선 등) 지원체계가 미비
- 국내경기부진으로 영세자영업자, 소상공인, 서민의 대출이자 상환부담 상승, 자금조달 어려움 지속

□ 목표

- 서민대상 저금리 상품 출시, 원스톱 금융서비스로 서민의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인터넷 전문은행(한국카카오은행, 케이뱅크)이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등으로 기존 금융권 이용이 원활치 못했던 중저신용자, 소상공인 대상 10%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
 - 향후 3년간 1.4조원대의 10%대 중금리 상품 공급
- 자금지원, 금융·취업상담, 고용·복지 연계 등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로서 ‘서민금융진흥원’ 설립 (기존의 휴면예금재단, 햇살론, 국민행복기금 통합)
-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,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강화
 - 채무자의 최소생활비 보장을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액을 최소 180만원(현행 150만원)으로 확대
 - 연체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대출만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‘신용대출 119 프로그램’ 도입(‘16년 상반기 중 실시)
- 신복위 워크아웃 추진 시 상각채권 원금감면율을 최대 50→60%로 확대하고,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70→90%로 확대(‘16년 상반기 중 실시)

- 신속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하여 대부업체 등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참여 확대
-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에 '법률지원단'을 설치하고 파산절차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과 연계 강화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**정책
순위 10**

아동이 기댈 수 있는 세상, 새누리가 만들겠습니다!

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아동학대 신고는 '12년 10,943건 → '13년 13,076건 → '14년 17,791건 → '15년 18,97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
- 우리나라의 '1천명당 피해아동 발견율'은 1.1명 수준으로 미국(9.1명), 호주(17.6명)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
-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웃과 학교의 무관심, 병원·경찰 등 관계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

□ 목표

-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진흥원 설립
- 출결석 상황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중심의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
-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및 아동치료병원 지정·운영
- 예비부부부터 출산, 학부모까지 단계별 학부모 교육 체계적 지원
-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선진국 수준 확보(총예산 대비 0.0047% → 0.1% 수준)
- 「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

□ 이행방법 및 기간

- (아동복지진흥원) 응급전화응대, 외부기관협력, 아동학대 관련 연구진행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갖추고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권리옹호 전담부서를 보건복지 산하 기구로 설립
 - 아동학대 예방, 교육, 홍보활동 및 관련 정책 수립
- (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) 기존에 설치된 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하고 지역 내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신속 연계
 - 교사의 학대의심 및 아동 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
 - 지역 내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학대트라우마에 대한 교육
 - 학대트라우마 치료 및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및 매뉴얼 개발 등
- (아동학대 전담경찰관) 신규인력 충원을 통해 기존 '가정폭력전담경찰관'과 통합하여 '학대전담경찰관' (APO) 으로 운영하면서 가정폭력 업무와 함께 향후 아동·노인·장애인 업무까지 전담
 - '17년까지 여성청소년업무 중심을 ① SPO(학교전담경찰관), ② APO(학대전담경찰관) 양대 전담체계와 ③ 여성청소년수사팀 3각 체제로 정립, 아동·노인·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효율적 대응

- (아동치료병원 지정·운영) 기존 국립대학병원 인프라 활용 통해 소아과 및 소아정신과를 중심으로 한 아동 친화적 환경 속에서 같이 거주하며 중장기적 집 중 심리치료 및 학교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지정·운영
- (단계별 학부모 교육) 예비부부, 출생신고 및 출산 전후, 자녀 연령의 단계별 부모교육이 실시되어 점진적으로 부모 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
- (법제·개정) 「피해아동지원에관한특별법」 제정 및 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」 등 개정
 - (아동학대예방 관련) 아동학대예방 및 지원종합계획 수립, 아동학대 실태조사,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실시, 아동학대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 운영,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포, 신고의무자 교육 등
 - (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관련)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관련 피해아동 취학지원, 법률상담지원, 피해아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, 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,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,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입·퇴소 절차,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등
 - (아동학대 대응 관련) 학대후유증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 정서지원을 위한 명령 추가, 법원이 부모 또는 가족,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필요 시, 심리 정서 치료를 명하는 명령 추가 등의 개정 필요

□ 재원조달방안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(※별첨) 23p 참조

※ 별첨

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

□ 소요예산 및 기본방향

-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 소요예산은 4년간(‘17~‘20) 4.3조원으로,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정상적인 세입구조 내에서 총선공약 소요재원 흡수

□ 재원충당 방안

- 연도별 예산증가분 활용 : 4.4조원 (연 1.1조원)
 - 연평균 예산증가규모가 정부의 중기재정지출 계획상 약 10조원인 점을 감안
 - 이 중 약 10%인 1.1조원 활용

※ 중기 재정지출 계획

(단위 : 조원, %)

	2014	2015		2016	2017	2018	2019	연평균 증가율
		본예산	추경					
재정지출 (증가율) (증가분)	355.8 (4.0)	375.4 (5.5)	384.7 (8.1)	386.7 (3.0)	396.7 (2.6)	406.2 10	416.0 (2.6)	2.6 (2.6) 9.8